기획재정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13.(화) 11:30	배포 일시	2022. 12. 13.(화) 9:00

담당 부서 <총괄>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유리 (044-215-5530)
		담당자	사무관 안기용 (giyongahn@korea.kr)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예타>	재무경영과	책임자	과 장 육현수 (044-215-5630)
		담당자	사무관 이수현 (s1234659@korea.kr)

자율·책임경영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 정원기준 상향(50→300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감소(130→(잠정)88개, △42) -

-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 상향(총사업비 1,000→2,000억원)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 제고 -

□ 정부는 '22.12.13.(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❶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❷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8.18.)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난 7.2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8.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정기준-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❶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❷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기타 후속조치(경영평가편람 수정, 각종 지침 개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됩니다.

* (**정원**) 50→300명, (**수입액**) 30→200억원, (**자산**) 10→30억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現 130→(**잠정**)88개(△42개) 수준으로 감소

<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달라지는 점 >

▪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 → 주무부처**로 변경

❶ **(평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실시

❷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❸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 필요

○ 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 종합 고려하여, 이에 맞게 공운법 제정('07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 **정원 · 총인건비 · 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 ·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됩니다.

○ 또한, **주무부처 경영평가**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타공공기관 관리 ·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 공타사업 평균 총사업비: ('17) 0.6 → ('19) 0.8 → ('21) 1.27조원('17대비 2배)
** (**총사업비**) 1,000→**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 공공기관 부담**) 500→**1,000억원 이상**

○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10.6.)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10→20점) 등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후속조치]

< **'22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 > (공운위 의결, 10.6.)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25→15점)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관리차별화**, **직무·성과중심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이사회·공시·징계 등)를 위한 **각종 지침 개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개정 완료, 10.17.)

○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경영책임성을 담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개정 완료, 11.3.)

○ **연구개발기관**의 **핵심사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 채용심사자료 수집범위, 채용단계별 외부위원의 구성 및 중복참여 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예산범위 內에서 지원 다각화(주거+α) 근거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12월중 개정 추진)

○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 (12월중 개정 추진)

○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하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23년초 개정 추진)

□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유리 (044-215-5530)
		담당자	사무관	안기용 (giyongahn@korea.kr)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예타>	재무경영과	책임자	과 장	육현수 (044-215-5630)
		담당자	사무관	이수현 (s1234659@korea.kr)
<경영평가>	평가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유정 (044-215-5550)
		담당자	사무관	이희한 (lihan423@korea.kr)
<이사회>	인재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복원 (044-215-5570)
		담당자	사무관	이승민 (top9412@korea.kr)
<채용>	윤리경영과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215-5620)
		담당자	사무관	이채영 (pororing@korea.kr)
<공시>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의영 (044-215-5650)
		담당자	사무관	김정수 (kjs0813@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정원 현황** ('21년말 기준)

		300명 이상	300명 미만
계 (130)		88	42
공기업 (36)	시장형 (15)	강원랜드, 가스공사, 공항공사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석유공사, 인천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수원 < 13개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2개 >
	준시장형 (21)	LH,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도로공사,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부동산원,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에스알, 제주개발센터, 조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 19개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 2개 >
준정부기관 (94)	기금관리형 (13)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 < 11개 >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 2개 >
	위탁집행형 (81)	가스안전공사, 건보공단, 심평원 고용정보원, 관광공사, 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제협력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산림복지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석유관리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소비자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에너지공단, 연구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원자력환경공단, 인터넷진흥원 장애인고용공단, 장학재단,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해양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 45개 >	건강가정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상산업기술원 과학창의재단, 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육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소방산업기술원, 수목원정원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업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 36개 >

※ **'23.1월 지정시('22년말 정원 기준) 실제 유형변경 기관 수는 변동 가능**